

# 새 전남도당위원장에 김승남 의원 선출

### 도당 상무위원회 만장일치 추대...남악복합주민센터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선봉에 서는 전남도당 건설”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19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상무위원회)에서 새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사진> 이날 대회에는 서삼석 전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윤재갑 국회의원과 김한중

도의회 의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등 도당 상무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취소됐다.

김승남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일하는 국회,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달라는 것 딱 두 가지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 50만 전남 당원들과 함께 선봉에 서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원칙 있고, 공정하며, 겸손한 도당을 건설하고 재집권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않고 하겠다”며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여성 당원 중 좋은 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 도당위원장은 고흥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장과 전대협 부의장으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19대 국회에서 당 수석사무부총장, 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전남도, 전남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 다음달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현안 26건 건의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전남의 정책현안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 다음달 시작될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영록 지사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에서는 이날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 건설과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국립 심뇌혈관센터 조성 등이 정부안에 일부 반영됐지만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용역 및 예타 완료 후 설계비가 투입돼야 할 사업 등 현안사업 26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대 설립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원점 재논의가 의대 설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0만 도민과 지역 의료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삼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린 뉴딜의 대표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통해 서남해안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12만개 창출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서 많은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농가당 재난지원금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에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남 도당위원장 등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원팀이 돼,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당, ‘추석 제수용품선물 전남 농산물 사주기 운동’ 동참 호소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우리농산물 구입 캠페인’ 도 실시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추석을 앞두고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축산인들을 돕기 위해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로 전남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추석절 농도 전남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

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광주·전남 시·도민과 수도권의 출향 인사들이 앞장서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로 농도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농업·농촌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를 앞두고 2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핵심당원들이 직접 강진읍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함께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코

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족대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우리 농산물로 선물 보내기 운동에 도민·당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명절이나 경조사에 사원에게 주는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



### “원칙, 공정, 겸손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 재집권에 앞장설 터”

“원칙과 공정, 겸손으로 강한 전남도당을 건설하여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신임 도당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승남 위원장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위원회 활동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청년과 여성인재 발굴, 당원교육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악주민센터에서 열린 도당 상무위원회 수락연설을 통해 “집권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 코로나 팬데믹과 집중호우 피해 극복과 함께 양극화 해소·한반도의 평화정착 등 진보의 가치를 더 충실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일들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전남 현안 해결 위해 시·도지사·시·도당위원장 4자 협의체 구성도 추진”

이어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 50만 당원과 함께 선봉에 서겠다”며 “재집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전남도 출임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 신임 위원장은 “방사광가속기, 군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시·도당위원장 간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지원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도당 운영목표를 ‘강한 전남도당 건설’로 정하고 ▲원칙·공정·겸손을 지키는 도당 건설 ▲전남 동·서부의 정치적 균형 발전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정당법상 제약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위원회 중심의 도당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광장 2020. 09. 25 (제27호)  
발행인 | 김승남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 김승남 도당위원장 첫 당직인사 단행

## 여성위원장 박현숙, 청년위원장 고용진, 농어민위원장 김성일 이용재 당기위원장 등 7명은 확대 운영위원으로 위촉



전남도당은 김승남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당직인사를 단행하고 오는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도당은 지난 15일 오후 김승남 도당위원장

주재로 1·2차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여성 위원장에 박현숙 전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 고용진 여수시의원, 대학생위원장에 홍창의 목포대총학생회장, 농어민위원장에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 또 당기위원장에 이용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기태, 대외협력위원장 서동욱, 정책위원장 우승희, 해양수산위원장 정광호, 남북경제

협력위원장 최무경(이상 도의원) 등 각급 위원장 7명을 임명하고 이들을 확대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도당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14개 상설위원회 중 노인위원장을 제외한 13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안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며, 노인위원장은 차기 운영위에서 임명기로 했다.

앞서 김 도당위원장은 지난 3일 개최한 제1회 도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한중 수석부위원장(도의회 의장)과 이민준·강문성·조광영·최선국·최병용 도의원, 정경환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수석부위원장, 김갑봉 도당사무처장, 송형곤 기획조정실장 등 9명을 지명직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도당 특보단장에 곽태수 도의원, 자문단장에 임영수 도의원도 선임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도당의 최대 운영목표를 ‘2022년 정권 재창출’에 두고 24명의 운영위원 외에 당기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 7명을 확대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도민·당원여론을 수렴해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김한중 도의회 의장

기획조정실장 송형곤 전 도의원...도당 당직개편 실시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지난달 26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기획조정실장에 송형곤 전 도의원, 대변인에는 홍지영 대변인(유임)을 임명하는 등 당직개편을 실시했다. 김한중 수석부위원장은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의장과 제7대, 9대, 11대 3선 도의

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송형곤 기획조정실장은 박상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10대 도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을, 홍지영 대변인은 광남일보 정치부장·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양기호 총무국장과 박경민 당원관리국장은 유임됐다.

다음은 당직 인사 명단.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한중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송형곤 △대변인 홍지영 △총무국장 양기호 △당원관리국장 박경민 △총무부장 김현진 △홍보차장 곽수렴

## 도의회, ‘전라선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무늬만 고속철 벗어나야” ... 최병용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여수)이 대표 발의한 ‘전라선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2021년에 시행 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차별 해소를 촉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수송애로구간 시설 확충, 고속화된 철도물류망 형성,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10년 단위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선은 2012년 고속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넘게 소요되어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국가기반시설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을 기초로 도시와 외곽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유독 전라선 이용자들만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선고속철도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과 맞물려 전남과 경남, 부산을 연결하고 남해안 전체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당 국회의원·지방의원 핵심당원 등 200여 명

## 홍수피해 구례·곡성에서 응급 수해복구 봉사활동 ‘구슬땀’

전남도당은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은 구례읍 5일시장에서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 지역 출신 서동욱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과 차기 도당위원장에 합추대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 의원의 부인 정옥금씨, 김한중 도의회의장과 지방의원, 당직자, 핵심당원 등 120여 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여수갑 주철현, 여

수을 김회재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과 당직자들도 구례와 곡성·순천 등지의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활동에 동참했다.

자원봉사에 나선 당원들은 이날 이틀간 400mm가 넘는 물폭탄으로 폐허가 된 상가와 주택에 들어가 가재도구, 판매용 농산물 등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김승남 의원은 “수해복구를 위해 달려와 주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 극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응급복구를 도와드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활동에는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과 여성당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봉사단원, 전경선·이혁제·차영수·이현창·곽태수 도의원도 참여했다.





# 김한중 의장, 전남도의회 개원 후 첫 전국협의회장 선출

## 이낙연 당 대표 면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요청”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도당 수석부위원장)이 도의회 개원 이래 첫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호텔인티시에 열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장성 출신 3선 도의원인 김 의장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김 의장의 전국협의회장 선출은 1952년 제1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보좌

관제 도입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15일 협의회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첫 행보로 국회를 방문, 이낙연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 200만 도민의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포기할 수 없다

의사들이 지난 4일 ‘코로나19’ 국난 속에서 국민 건강을 불모로 한 파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복귀기로 정부여당과 전격 합의했다.

파업철회는 환영하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파업을 접는 대가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중단 요구를 관철시켜 도민의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및 부속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격차 해소는 당분간 요원하게 됐다.

전남의 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도민 건강권 확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낙후된 전남의 의료 인프라마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향후 의정협의체 재논의 과정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9. 7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전남의 코로나 영웅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역학조사 지원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소통 간담회를 했다.

다. 이어 “지난 8월 순천을 비롯한 도내 집단감염 확산 위기 때 발 빠르게 대처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므로 좀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현장·심층 역학조사와 기술을 128회 지원했으며,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 25개소에서 43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했다.

전남도는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감염병관리지원단 간담회  
...10월부터 전국 첫 지원단 직접 운영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시락을 함께 하며 간담회에 나선 김 지사는 “7개월이 넘는 동안 쉬지도 못하고 방역활동에 매진해 준 전남의 코로나 영웅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

전남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염병 발생 시 분석과 정보 교류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김한중 도의장,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소외층에 대한 이웃 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김한중 의장은 인예지 자연치유 요양원과 사랑나눔요양원, 프라치스꼬의집 등 도내 9곳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웃을 살피는 손길이 줄어들 복지시설 생활인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낀다”며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각 지대의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생활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첫 대변인에 최선국 도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인 최 의원은 대변인으로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를 하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최선국 도의원(목포3·사진)을 도의회 첫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2018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한 최 의원은 11대 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 대변인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대변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찬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1 |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상무위원회)에서 김승남 신임 도당위원장이 서삼석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2 | 김승남 신임 도당위원장이 서삼석 전 도당위원장에서부터 당기를 전달받고 있다.
- 3 | 도당 상무위원들이 도당 정기대의원대회(상무위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4 | 구례읍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이현창 도의원(구례)이 침수피해 주택에서 가재도구를 나르고 있다.
- 5 | 김승남 도당위원장이 지난 15일 도당 회의실에서 확대운영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6 | 전남도당은 지난 3일 1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명직 운영위원 선출 및 운영위원추천위원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7 | 김승남·서삼석 전·현임 도당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8 | 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현숙)는 울산여성위원회와 제주여성위원회에서 구례 수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에 보내와 지난달 27일 구례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김원이 의원, “국난 극복이 먼저 …복지위 국감 연기” 주장

##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격무 시달려, 국회 배려 필요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9일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코로나19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연기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상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일간 국정감사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최일선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역학조사와 파견 근무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이 진행되면 또 다시 공무원들은 수많은 자료요청과 질의응답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며 “당연히 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분산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제대로 된 국감이 치러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감을 앞두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산되는 것보다 보건과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두 기관은 이미 업무보고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매일 국민들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온전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국회가 선제적으로 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 김원이,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법제화

## 제정안 대표 발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제 도입도 추진

김원이 의원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인구 1천명당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가 가장 많은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격차 불균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및 장학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목포지역위원회, 고하도 연안서 부유쓰레기 긴급 수거활동



김원이 의원, 시·도의원, 청년·여성당원 등 30여 명 참여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목포 고하도 연안에서 최근 영산강 홍수로 목포 인근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긴급 수거 활동을 벌였다. 수거 활동에는 김 의원과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 청년과 여성 당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목포항 일원에는 지난 주말부터 상류지역 홍수에 따른 수위조절로

영산호 수문이 개방되면서 해수부 추산 8,000여t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로 갑자기 밀려든 해상 부유쓰레기로 인해 악취는 물론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통항의 안전 등 여러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당분간 영산호 수문개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유입 쓰레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목포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며 “향후 바다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급격한 담수 유입에 따른 양식장 피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피해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원이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유아 건강검진 책임소재와 감염병·안전사고 보호 규정 신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보호자가 직접 하도록 안내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원장이 영유아 등의 건강진단을 ‘국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도록 해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염병 확산 예방 필요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사고방지를 위해 건강검진의 책임소재와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원이,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현충원 참배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국립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사진> 김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자

명하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인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걱정되는 요즘, 대통령님이 더욱 그립다”는 소회를 밝혔다.

# 김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반사회적 범죄, 철저히 대응해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경찰청 자료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경찰청 집계(8월 26일 기준) 결과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

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된 1,630명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주철현, 오동도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 7억 '확보'

##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정...내년 3월 준공 예정

주철현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오동도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바다의 꽃섬' 오동도는 해안 절경과 울창한 동백나무 군락지로 널리 알려져,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이다.

연간 방문객 중 보행 약자는 180

여만 명으로 집계돼 무장애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내년 3월이면 오동도를 찾는 보행 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주 의원은 민선6기 시장 재임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동도 서방과제를 2m 높이고, 자전거 및 보행자 동선 분리, 방과제 벽

화, 친수광장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여수신항 서방과제 보강사업'을 여수해수청과 함께 2015년 8월부터 307억 원을 들여 추진했다.

주 의원은 "오동도 동백숲이 무장애길로 조성되면, 탐방객 편의 제고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주철현, 어민단체-어업 관련기관 수산자원보존 간담회



### "어업지도 단속 위주보다 홍보와 예방 위주로 개선을"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4일 여수수협에서 '수산자원보존간담회'를 열고, 어업지도가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와 예방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산현안 해결과 관련기관, 어민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어업인과 16개 수산단

체, 해양수산부 및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여수시, 여수해경, 수산자원공단, 여수수협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어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 △어업의 구조개선 및 어구어법 연구개발 △어업인들의 자율적 준법 조업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어업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여수지역의 경우 생계형 영세어업이 대부분인데다 어종이 다양하고 금어기도 달라 어업인들이 단속에 자주 적발되고 있다.

주 국회의원은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와 계도가 선행되는 어업지도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정착과 확산을 유도해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는데 모두가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 주철현, 태풍·호우 여수 해양쓰레기 처리예산 4.25억 '지원'

집중호우 관련 2.5억원, 태풍 바비 관련 1.75억 원 확보

주철현 의원은 태풍 바비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예산 4.25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예산 8.75억 원을 전남에 배정하고 해수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에는 100% 국비 2.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어 태풍 바비 내습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은 재해대책본

부 심의 없이 해수부가 지원하고, 여수에는 1억7천5백(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재부와 협의 후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 전남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 주철현 의원, 1기 시민보좌관 27명 위촉

주철현표 시민정치 시동...시·도의원 등 60여 명 참석

주철현 의원이 1기 시민보좌관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주철현표 시민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 2층에서 1기 시민보좌관과 여수시갑 지역위원회 고문단, 운영위원 및 소속 도·시의원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주철현 국회의원 시민보좌관 발대식을 했다.

제1기 시민보좌관은 ▲시민민원보좌관 13명, ▲시민소통보좌관 6명, ▲시민정책보좌관 8명 등 총 27명이 위촉됐다.

1기 시민보좌관들은 발대식에서 '오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출범과 함께 시민보좌관들은 ▲현전세제도의 문제점 제기 ▲여수산단 직원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다자녀 기준 재설정에 관한 논의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 의대유치, 대학병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는 물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의 역할도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 주철현 의원,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구슬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 펼치겠다"

주철현 의원이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과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여수시 돌산읍 둔전 독거노인 집을 찾아 외벽 도색 등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주민 등 3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의 사회 공헌사업

으로, 여수농협 관내 4곳, 여천농협 관내 2곳에서 진행됐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서완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김석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이석진 농협 여수시지부장, 박현영 여수농협 조합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수해로 인해 힘겨운 농업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여수을지역위원회 구례 5일시장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 김회재 의원, 구례군에 정성껏 모은 구호물품도 전달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11일 여수을지역위원회 선출직 공직자와 여성·청년위원회 소속 핵심 당원 등 30여 명과 함께 구례 5일시장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봉사활동에는 여수시새마을회와 적십자회, 체육회 회원들도 참여했으며, 지역 요식업체에서는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여수을지역위 당원들은 이날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서서천 제

방이 무너지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 5일시장 상가와 인근 주택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당원들은 상가와 집안에 쌓인 흙더미와 침수피해를 입은 상품과 농산물, 가재도구 등을 치우며 시름에 빠진 수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이어 15일에는 구례군청을 방문, 김순호 군수에게 당원들이 정성껏 모은 라면과 생수, 커피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기원했다. 김회재 의원은 “구례·곡성군을 비롯한 전남 7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지만 참된 복구와 회복은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는 이웃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작은 사랑과 봉사가 좌절에 빠진 이재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김회재 의원, 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김회재 의원이 지난 9일 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무직 당직자로 ‘김회재 법률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김 의원은 “27년여의 법조인 경험을 살려 법률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당과 긴밀

히 협력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법과 법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법률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로 의정부지검장, 광주지검장을 거쳐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원내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 김회재 의원,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 재심의 해야”

전남도와 구례군민 반대 불구, 국토부 지난 6월 운행 허가

김회재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도의 반대와 관련법 위배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허가된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을 재심의해야 하며, 심의 전까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함양~백무동을 하루 6회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운행하는 경남도의 안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운행을 승인했다. 당시 전남도는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례군민들은 “지역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지리산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7조에 따르면 연장구간의 운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운송업체는 1회 운영으로 신청해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해로 힘든 구례 군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부당하게 결정된 이번 사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버스 회사와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회재, 버스이용객 편의 개선 예산 7억 확보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예산은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확보했다. 이번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여수에는 시민들의 평등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과 편의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가시성이

높은 교통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여수시는 그동안 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회재, 굴 껍데기 등 폐각 처리 법안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은 18일 굴 껍데기 등 폐폐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폐각을 추가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폐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안가 곳곳에 방치된 굴 껍데기는 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회재,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

김회재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

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을 지난 총선 10대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국가산단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육성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개정안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와 해당 지역 지방대학 또는 고교 졸업출신 인재를 의무 채용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 소병철 의원, “감사원 감사서 인권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해야”

## 공익감사 청구는 독립적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법사위 전체회의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 주문하며,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 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 1,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며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 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

사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뼈아프다. 법관으로서 존경받던 최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나 일어날 법한 시비들이 벌어진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약속해 다시는 이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야당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는 명백한 위법”

소병철, 법사위 차원의 출범 촉구 결의안 제안

소병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수처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 거

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며,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 법 규정 그대로 7월 15일 출범이 돼야 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오늘 법사위가 출범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 소병철, ‘선거구 획정 시 면적 고려’ 선거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거대 선거구 ‘부작용’ 방지

소병철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 선거구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두고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을 적용할 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어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21대 총선 당시, 순천은 올해 2월 기준 인구가 28만1천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분구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1개 선거구로 통합됐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께서 많은 상처를 받아 반드시 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순천이 단독 분구돼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액 63억1천만원 결정

소병철, “수해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소병철 의원은 22일 “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 금액이 국무회의에서 63억1천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 금액은 국비 30억1천만 원, 지방비 11억 원, 지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액이 37억9천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 이후, 수시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복구활동을 도왔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직접 호소

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제기한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병철, 의원회관 사무실에 ‘순천소통방’ 마련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 ‘순천소통방’을 마련하고 열림식을 개최했다. ‘순천소통방’은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편히 업무를 보고 지역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소로, 의원실 내 회의실을 활용해

만들었다. 소통방은 지역 특산물 홍보와 소통의 장 등 국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김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소통방 열림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과 21명의 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

하했다. 소 의원은 “국회를 방문하는 공무원과 시·도의원, 지역민들이 편히 쉴만한 공간이 없어 늘 아쉬웠다”며 “순천소통방을 통해 작지만 지역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 소병철,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 토론회 개최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달 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코로나 시대의 의사 인력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는 “의사 인력증원과 함께 지역거점 병원이 확충돼야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은 “공공의료야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사태에 맞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역시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의료체계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도민들의 염원인 전남권 의대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 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칠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갈수기엔 물 부족, 홍수기엔 방류 걱정 더 이상 없어야...”

## 서동용, 섬진강 유역 홍수피해대책위 주민들 면담 “모든 주민 공유할 수 있는 물관리 시스템 마련” 약속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수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섬진강 유역 7개 시·군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만나 “항구적 홍수 대책을 넘어 섬진강 유역 모든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물관리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보상 7개 지역 대책위 대표들은 이날 코로나 19와 폭염으로 피해 복구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책임을 규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구례군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홍수피해는 섬진강 하류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댐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라며 환경부와 수공의 사과, 근본 대책 마련,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의원은 “저 역시 정세균 총리에게 급작스러운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조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요청했다”며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분노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며,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홍수기에는 방류 걱정으로 노심초사 살아온 게 반백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은 물줄기를 따라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쓰는 공유재로 어느 누구도 독점할 권리는 없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홍수 대책을 넘어 섬진강 유역 모든 주민이 섬진강 물을 공유할 수 있는 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과 13일 구례에서 모여 전남·북과 경남 3개 도, 7개 시·군 주민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보상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 서동용,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관세법개정안 발의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등의 철강부원료 12대 품목은 2~6.5%의 관세가 잔존하는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경우 수입관세가 없거나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산 철강제품이 값싼 수입산에 역차별 받는 실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부원료 관세가 폐지되면, 포스코의 경우 2019년 기준 약 107억 원의 제조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 서동용, “공공의료 확보 위해 의사증원 필요”

서동용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는 올해 5월 기준 3,507명으로 감소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로도 이

어지고 있다. 지방일수록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병상 수가 많은 것은 물론, ‘치료가능 사망률’과 ‘예방가능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보건 의료기관에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 의의가 아니면 지방공공보건 의료 체계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 서동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결정 환영”

서동용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 통과 이후 합법 지위를 얻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를 받았다.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법원에서 1, 2심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 쟁점을 떠나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통보한 행정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조해산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 서동용, ‘지역혁신 위한 지방대 혁신 토론회’ 개최

### “지역·지방대학 혁신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 양성해야...”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 정병석 총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경남플랫폼 이은진 센터장은 경남의 USG 공유대학 기반 대학교육 혁신 방향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공유·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새로운 틀의 정책이며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의 위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를 선택·집중적으로 길러내도록 지역혁신과 지방대학혁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서동용,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백운산 해법’ 모색

서동용 의원은 지난 8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만나 “백운산을 둘러싼 상생 방안과 광양·구례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백운산은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1천여 종의 식물과 태고의 원시림을 간직한 생태의 보고로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산이다”면서 “광양, 구례 지역민들에게는 자연의 쉼터이자 자긍심을 높여주는 명산이며 고로쇠와 임산물 채취하는 삶의 터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는 백운산 남부학술림을 통해 지난 80여 년간 수 많은 혜택을 누린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해묵은 소유권 갈등 해결을 넘어, 지역에 기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주

었으면 좋겠다”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정훈, 지역특구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

현행 규제특례 외 실질적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필요 지역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되어 규제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신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된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다. 지역특구 제도 정책 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신정훈,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 ‘그린뉴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이나 기업 유치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만료를 앞둔 법의 일부를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이 법의 시한을 없애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강원랜드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율도 현행 25%에서 35%로 인상하고 지역 배분을 늘렸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신 의원은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회생과 정주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SRF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 조속한 타결 최선”



신정훈, 나주SRF범대위와 정책간담회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1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손실보상 주체 기관 간 최고 위급 협상을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 시한(9.25)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협상이 진전

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손실보상 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김용인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를 제외한 4자 거버넌스 당사자 협상으로 결정돼야 할 손실보전방안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거버넌스 합의서는 관이 합의해야 가능한 구조인 만큼 산

업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광주 SRF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지지부진한 손실보전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추진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 업무 또한 생산업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 상 중기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국내외 연수로만 규정돼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 신정훈 “직장 내 괴롭힘 대상 도급인·고객·친족 등으로 확대”

신정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달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해 최근 발생한 경비원 사망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그릇된 직장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고위공직자 부동산처분 의무화”

신정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정훈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매각 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

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 보유 시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 신정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도급금지 범위 확대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급,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산업구조의 변화,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설비·작업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영세 농어업인 포함해야”

##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예결위에 공식 요구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영세농어업인이 제외된 것과 관련, 국회 농해수위가 예결위원회에 지원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전무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개호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

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앞서 3번의 추경을 통해 34조6,000억원을 증액했지만, 농해수위 소관 5개 기관 예산은 2,12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관련 예산을 줄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에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21일 아침 영광수협 수산물 위관장을 찾아 참조기와 꽃게 경매를 지켜보며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했다.

## 이개호, 함평 수해피해 현장 방문

이개호 의원(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8일 함평군 학교면 수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장미에 대비한 안

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이 의원은 이날 “장기화되는 장마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농어촌에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에 함께 동행한 농어촌공사 박종호 전남지역본부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피해복구와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개호, 영광 한빛원전 부실공사 진상조사 촉구



이개호 의원은 22일 영광 한빛원전 부실공사 사태와 관련, 국회 산자위원장과 과방위 간사실을 차례로 찾아 조속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군의회 의장도 함께 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심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또는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가 중요산업의 방해자로 실추된 지역민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이개호, ‘양봉산업발전법’ 연속 토론회 개최

이상기후로 꿀벌 멸종위기...다양한 밀원 개발 시급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봉산업 발전법안 원년 기념 제도 활성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1차 토론회는 ‘그린뉴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 SOC 밀원확대방안’을 주제로 꿀벌의 멸종위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한 양봉산업의 자연보전기능 등을 재조명했다.

이어 ‘전업 양봉농가 수익보전을 위한 유통 개선방안’을 주제로 2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꿀벌과 양봉산업은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생산량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 생산될 정도로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 역할이 크다”면서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양봉산업 육성과 경영 효율화 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카시아 개화기가 불규칙해지고 있어 밀원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개호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추경 편성·조속한 집행해야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해 신속한 피해 복구 예산과 인력 지원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및 후속 대책 마련 ▲4차 추경안 편성 추진 및 조속한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개호, 도의회 농수산위 소속 도의원 면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도당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2021년도 농수산분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광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원·조광영·박진권 도의원이 참여했으며,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과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서삼석·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도의회 농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업분야의 경우 ▲스마트팜 클라

우스 시스템 구축 ▲국립 축산 창업교육기관 건립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운영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원예재배 출하조절 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수산분야는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활어 산지 직거래 유통 확충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을 요청했다.



#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발의



### 지방소멸 특단의 대책 필요...당 중진의원 등 28명 공동발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105곳(46.1%)...작년 대비 12곳 증가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종합적 지원내용 포함돼



김승남 의원은 지난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당 중진 의원과 전남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새롭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남 무안군, 나주시 등이며, 이미 고흥, 신안과 경북 봉화, 의성, 청송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별법은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존·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주

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7년도부터 비수도권 전체의 GRDP를 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승남 의원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전라남도-경상북도과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7년도부터 비수도권 전체의 GRDP를 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승남 의원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전라남도-경상북도과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 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3법 개정안 발의  
원재료가 GMO면 제조·가공과 상관없이 GMO 표시해야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

김승남 의원은 7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

부다. 이에 따라 원재료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어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

도적 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합치 표시기준도 0.9%로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위반 시 제재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소비자에게 GMO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김승남,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도당 연락소와 교육연수원 각 1개 이하로 설치 가능

김승남 의원은 지역 정당의 효과적인 사무 수행과 실질적인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시·도에 시·도당연락소와 시·도당 교육연수원을 각 1개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당법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경우 그 조

# 김승남 의원

##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등 6개 사업 추진 '탄력'

김승남 의원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요 특교세 사업은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10억원) ▲보성 메타호반 명품자전거길 조성(5억원) ▲보성 상유십이 성곽길 조성(5억원) 등이다.

또 ▲장흥고~남부관광로 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장흥 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4억원) ▲강진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9억원) 등 모두 6건의 사업비이다.

특히 노인건강타운은 전국 최고 고령화로 노인 인구(39.7%)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흥에 필요한 시설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도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메타호반 명품길 조성사업의 잔여 구간 정비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와 주암호가 어우러진 명품 자전거도로 개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보성 상유십이 성곽길 조성사업은 열선주 주변 정비를 통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고~남부관광로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흥읍 시가지권의 주민 2만여명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비는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영랑 김윤식의 감성이 어우러진 강진권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김 의원은 "지역의 필수 현안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남 의원, "한국마사회

##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법 발의"

김승남 의원은 지난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약 2만 3천명이 종사하고, 3조4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된다.

세수 축소와 말산업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말산업 피해액 총 4조9,852억원 추정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등으로 부작용 차단

지난 6월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마권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되며,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4%의 이익금 중 70%가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

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발매 도입 시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처럼 장외 이용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이 위원장 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소 1곳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 1개소로는 관할 구역의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시·도당 당직자와 당원 대

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정당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직불금 수령이력 없더라도 직불금 신청 가능”

윤재갑 의원, 위헌성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 구제를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민만 신청토록 하여 과거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 배제했다.

앞서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직불금 미신

청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 간 까닭은?

수협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시식 행사

윤재갑 의원은 지난 13일 수협 중앙회 17층 구내식당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촉진 시식행사에 참석, “양식 전복의 군납과 단체급식 납품 등 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촌과 수산업계에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 임직원은 본사 구내식당에서 전복미역국, 전복버터

구이, 광어튀김 등 해남·완도·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나섰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을 홍보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기계화·자동화 시급”

윤재갑,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윤재갑 의원은 수산업 인구 감소와 노령화,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수산업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계화·자동화·무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해수부장관은 기자재 및 관련 신기술 개발과 보급,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산기자재 산업은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향후 우리나라 GDP의 한 축을 받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윤재갑 의원

### “지역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30억 확보”

해남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 완도읍 시가지 개선 등

윤재갑 의원은 최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남군 화산면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진도군 녹진관광지 경관이미지 개선사업 등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매년 가뭄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 등을 겪고 있는 해남 무학지구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양수장과 저류지, 용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균열과 파손이 빈번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완도읍 중심 시가지에는 모두 7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도로 보수·보강 및 포장작업을 실시한다.

완도 공설운동장에도 내년까지 22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한다.

진도군 녹진관광지 경관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8억원을 투입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울돌목 진입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산적인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재갑 의원, 2주택 다주택

###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법제화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공직사회와 정책 신뢰 강화”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위)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 임용 등 인사 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 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재갑,

###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확대 법안 발의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대 3년 육아휴직 적용

윤재갑 의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며,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에 대해 최대 1년의 기간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 육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경력 단절로 연계되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최대 3년으로 보장된 반면, 일반 근로자는 최대 1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육아 환경 개선 및 경력 단절을 막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농업 예산 증액 없이 한국농업 미래 없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 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마저 붕괴되게 된다.



20.6%가 감소했다. 자연재해 확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국회차원의 농업분야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식량자급률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7년 만에 3% 선 무너져 식량자급,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업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자금률 제고 사업 중 특히 발작물 자금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비지원”사업은 21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서 의원의 지적이다.

농수축산인을 위한 경영자금의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예산증액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분야 예산 증액과 함께 농어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삼석 의원, 해양안전 견인할 해경 신안파출소 개소

“조속한 청사 완공 위해 예산 지원 건의하겠다”

해경 신안파출소가 1일 신안군 암태면에서 임시청사로 출범했다.

신안파출소는 지난달 31일 개소식을 갖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개소식은 당분간 연기하고 바로 현장업무에 임하기로 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천사대교 개통 후 목포·신안 방문객이 지

난 해 기준 5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해양구조와 치안 업무를 담당할 파출소 신설이 요구됐다.

또한 관내 선박 대부분이 2톤 미만 선외기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해경 파출소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그간 3개 파출소(지도·서산·북항 파출소)가 담당하던 광범위한 관할지역을 신안파출소 개소로 4개 파출소가 분담하여 초동 대응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경 신안파출소가 임시청사로 개소했으나, 청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관련예산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서삼석 “임업직불제 도입해야”

임업인 소득 보장 등 담은 법률안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업농가의 연간 소득액은 3천800만원으로 이는 어가의 78%(4천800만

원), 농가의 91%(4천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와 달리 임업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산림 분야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돼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

##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주체 일원화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 “사업별 관리주체 이원화로 사각지대 발생”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어항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여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어촌어항과에서 담당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107억여 원, 해양보전과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87억여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침적쓰레기 수

거사업계획 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했다.

어촌어항공단의 어항관리선 운영 사업의 경우 침적량 조사 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한 반면, 해양환경공단은 총 침적량 조사를 통한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다.

서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 지적했듯,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해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가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 정책의 관리주체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삼석 전 도당위원장,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 도당 활동자료집 발간



민생정치 현장, 43만 전남 당원과의 소통 기록 담아

서삼석 의원(전 도당위원장)은 지난 2년 간의 민생정치 현장과 전남 43만 당원과의 소통의 기록을 담은 활동자료집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를 지난달 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서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 간의 도당의 활동사항을 148쪽(B5 판형)의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2020총선 정책토론회 개최(5. 29), 총선 승리를 위

한 방방곡곡 경청투어, 원내대표단 전남 민생탐방, 정당 사상 최초 ‘정책 페스티벌 경연대회’,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교육, 전남 농정 대전환 정책토론회 등의 정책활동과 주요 행사, 도당 논평·성명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생현장 곳곳에서 도민·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각 지역위원장님과 사무처 당직자, 핵심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종규제로 임업인의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상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종사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 종사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2019년4월1일~2022년3월31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서 의원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 아니라 산림경영을 향상과 산림건강성 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것입니다

## 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 민간소비** 창출
-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